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4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3.27.-2025.04.02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7
	■ 중국	
-	광저우, '투자발전 10조' 발표 및 '산업용지 슈퍼마켓' 개설	6
-	중국 최초 '녹색 경영환경 보고서', 텐진에서 발표	6
-	중국, 생물제조·양자과학 등 미래산업 육성정책 발표 예고	7
-	저장성, '신제품 우선출시 경제권' 본격 조성	7
-	중국,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개정안 공개	8
-	중일한 제13차 경제장관회의 서울서 개최, 경제협력 확대 합의	8
-	웨이강오(粵港澳) 대완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마카오서 발표	8
-	충강오(琼港澳) 황금관광삼각지대 조성 협약 체결	9
-	후난세무국, 민영경제 지원 위한 '세정 12조' 발표	9
-	랴오닝, AI·디지털로 전통산업 대전환 추진	9
	■ 일본	
-	도쿠시마현, 2027년까지 공공시설 40곳에 태양광 발전 도입	10
-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혼다 계열과 자율주행 실험 협정 체결	10
-	오키나와, 의학 연구거점 본격 가동... 류큐대 기반 강화	11
-	가와사키시, EV·자율주행 버스로 교통 혁신 본격화	11

– 하마마쓰시, 민간과 협력해 버스망 재편… 자가용 의존 탈피 추진	12
– 규슈 · 오키나와, 2월 유효구인배율 1.16배… 3개월 만에 하락	12
– 도쿄도, 순환경제 · 생물다양성 대응 60억 엔 펀드 조성	13
– 도요타자동차, 수소 제조소재 개발 본격화… 전담조직 신설	13
– 나가노 시오지리, 자율주행 실험 통해 지역 디지털 역량 강화	13
– 치바현, 2023년 관광소비 1조8000억 엔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14
– 군마현,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4개 시정촌 추가 보조	14
 ■ 필리핀	
– 필리핀, 2026년까지 태국형 메가 푸드허브 건설 추진	15
– 필리핀, 튀르키예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15
– 필리핀, 미중 무역경쟁 속 중국 기업의 생산기지로 부상	15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美 반도체 관세 부과로 무역 위기 직면	16
–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원국들과 현지 통화 기반 무역 강화 추진	16
 ■ 라오스	
– 라오스, 수력발전 부문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16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루피아 27년래 최저치 기록… 중앙은행 시장 개입 준비	17
 ■ 베트남	
– 베트남, 중소기업 위한 포괄적 금융 생태계 구축 추진	17
– 베트남, LNG · 자동차 · 농산물 관세 인하 추진	17

– 베트남, 영국과 소비자보호 관련 양해각서 체결	18
▪ 싱가포르	
– 싱가포르와 베트남, 5개 신규 협정 체결로 관계 강화	18
▪ 캄보디아	
– 캄보디아, 신규 투자 프로젝트 12건 검토	19
– 캄보디아, 홍콩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19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광저우시는 산업 공간과 투자 기회 홍보행사를 통해 ‘투자발전 10조’를 발표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 본격화. 100km² 산업용지와 690개 지구를 분류 관리하고, ‘산업용지 슈퍼마켓’을 개설해 즉시 착공과 대금 분할납부 등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실행력 제고
- ✓ 톈진(天津)경제기술개발구는 중국 최초의 ‘녹색 경영환경 보고서’를 발표해 녹색 정책, 산업, 금융 등을 종합 반영한 평가 지표 제시, 환경영향평가 통합과 친환경 기술 도입 등으로 녹색산업 매출 1000억 위안 돌파를 목표로 녹색 발전 가속화 추진
-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생물제조, 양자기술, 원자급 제조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제정 계획, 인공지능 기반 제품 1,000개 개발 장려와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기술 대중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 추진
- ✓ 저장성은 ‘저장에서 최초출시’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 진작과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며, 12개 핵심 상권의 ‘퍼스트 이코노미 (First Economic)’ 생태계를 조성해 AI 디자인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혁신 브랜드 육성 계획
- ✓ 중국 국세총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 명확화 추진, 지방정부 세수 목표 강요 금지, 탈세 개념 재정립 등 조세 행정의 정당성, 투명성, 효율성 등을 동시 강화
- ✓ 제13차 한·중·일 경제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자유무역, 공급망, 디지털경제 등에서 협력 강화에 합의, 한중일 FTA 조속 추진과 RCEP 체제 내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역내 경제통합 노력
- ✓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환경포럼에서 ‘웨강아오(粵港澳) 다완구(大湾区)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이 발표되어 회의·전시 분야 탄소배출을 줄이는 구체적 전략 제시, 음식업계와의 저탄소 협약 등을 통해 녹색 전환 확대

- ✓ 하이난, 홍콩, 마카오는 '황금관광삼각지대'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무비자 제도를 활용한 복합 관광 루트 활성화 추진, 공동 브랜드 개발 등으로 역내 관광경쟁력 강화와 상호 시너지 창출 기대
- ✓ 후난성 세무국은 '세정 12조' 를 발표해 전자세무 시스템 확대, 세무조사 절차 완화, 납세 신용 회복 등 제도를 통해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 랴오닝성은 'AI+제조' 전략을 토대로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산업 클러스터 중심 '점-선-면' 전략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신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쟁력 제고

○ 일본

- ✓ 도쿠시마현은 공공시설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PPA 방식으로 설치해 초기비용 없이 전력을 생산, 2027년까지 총 40개소로 확대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탈탄소 정책 추진
- ✓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는 혼다기술연구소와 협정을 맺고 산지·해안 등 다양한 지형에서 레벨4 자율주행 실험을 추진, 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이동수단을 늘리며, 2025년 이후 본격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
- ✓ 오кина와현 기노완시의 의약 연구센터는 류큐대 의대·병원을 이전하며 자원을 집약하고 재생의료 실험실, 바이오뱅크 등을 함께 구축, 이를 통해 스타트업 유치와 의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며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 계획

- ✓ 가와사키시는 운전기사 부족과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버스를 도입,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 시민 체험 확대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통혁신을 본격화하고 도심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상황
- ✓ 하마마쓰시는 원슈철도와 협정 후 노선버스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방사형 노선 개편, 데이터 기반 교통관리 등을 추진하며, 민관 협업으로 스마트시티 구축과 교통사고 예방 도모
- ✓ 규슈·오키나와 2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16배로 3개월 만에 하락. 원자재비 상승으로 채용 억제가 있었으며, 후쿠오카는 1.18배로 둔화. 제조업 구인은 1년4개월 만에 증가했으나 외식업은 비용 부담으로 축소하는 실정
- ✓ 도쿄도는 자원순환·생물다양성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60억 엔 규모 펀드 조성, 배터리·태양광 패널 재활용, 공유서비스 등 혁신기업을 지원하며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확대
- ✓ 도요타자동차는 희소금속을 쓰지 않는 수소 제조장치용 소재 개발을 위해 혁신재료개발부를 신설, 제조비 20% 절감을 목표로 연구·시험 라인을 구축 중이며, 2028년 본격 시장 투입 계획
- ✓ 나가노현 시오지리시는 레벨4 자율주행 실험을 통해 무인 운행 기술을 검증하고, 주민 참여형 지도 데이터 제작 시스템으로 지역 디지털 역량을 높이며 스타트업과 협업해 산업 활성화 추진
- ✓ 치바현은 2023년 관광소비액이 1조8000억 엔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인바운드 관광객의 고가 소비 및 숙박비 인상이 지역 경제 효과를 극대화해 관광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상황
- ✓ 군마현은 중소기업이 임금을 5% 이상 인상하면 1인당 5만 엔을 지원하는 ‘임금 인상 촉진 보조금’을 신설하고, 일부 시정촌이 추가 보조를 마련해 기업 처우 개선과 지역 소비 활성화 유도

○ 필리핀

- ✓ 필리핀은 2026년까지 루손 북부·남부에 태국형 메가 푸드허브 구축, 전국 저온저장시설도 확충하여 농산물 공급망을 안정화 추진
- ✓ 필리핀 정부는 튀르키예와 관광·무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전국 문화유산 및 산업 잠재력을 홍보하는 ‘타라 나 투어’ 전략으로 투자·교류 기회를 확대 계획
- ✓ 필리핀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전하도록 유치 활동을 강화, PEZA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국적 투자 유입을 모색하는 실정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로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AMRO 권고에 따라 구조개혁과 금융시장 안정책을 마련해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산업의 충격을 줄이려는 상황
-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현지 통화 결제협력을 확대하고 QR결제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모색해 무역결제 간소화와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 추진

○ 라오스

- ✓ 라오스는 7000MW 이상 수력발전 용량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허브로, 신규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 PPA·BOT 방식으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상황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환율이 1998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하자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예고, 양호한 거시지표와 구조개혁 성과를 강조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투자환경 안정화 추진

○ 베트남

- ✓ 베트남은 담보 부족 등 대출 제약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맞춤형 금융상품과 제도 개선을 추진, 기업금융의 포용성을 높여 혁신 성장을 견인하려는 정책 기조 강화
- ✓ 베트남은 미국과 무역균형을 맞추기 위해 LNG·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사기 방지 제도를 개정,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 대미 경제협력 조정 계획
- ✓ 베트남은 영국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결함제품 리콜, 대중 인식 제고, 규제 당국 역량 강화를 추진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시장 환경을 조성 예정

○ 싱가포르

- ✓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에너지·디지털·금융 등 5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 산업단지 신규 착공, 탄소배출권 연계 등의 협력을 강화해 누적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심화

○ 캄보디아

- ✓ 캄보디아투자청은 총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12건 심사, 전기·의료·전자·서비스 등 다방면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프로젝트 유치 강화
- ✓ 캄보디아는 홍콩과 병원개발 등 보건의료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일대 일로를 기반으로 의료 인프라 발전과 경제협력 시너지를 높여 국민 건강 수준 향상을 함께 모색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광저우, '투자발전 10조' 발표 및 '산업용지 슈퍼마켓' 개설 - 광저우시는 산업 공간과 투자 기회 홍보행사를 통해 '투자발전 10조' 를 발표하며 글로벌 투자자 유치 본격화 추진. '즉시 착공', '대금 분할납부', '투자강도 비강제화' 등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행정 간소화 추진 - 100km²의 산업용지와 690개 산업지구를 보유한 광저우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용토지를 분류 관리하여 입지 결정의 신속성과 정밀성 향상. 이는 기업 투자 실행력 제고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에 긍정적 기여 - 개설된 '산업용지 슈퍼마켓' 은 420개 필지, 19km² 우량 토지를 제공하며, 기업이 산업유형과 입지조건에 맞춰 실시간 검색 가능. 토지 공급과 수요의 정밀 연결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투자 편의성 극대화 기대
	○ 중국 최초 '녹색 경영환경 보고서', 텐진에서 발표 - 텐진경제기술개발구는 녹색 정책, 산업, 금융 등을 종합 반영한 전국 최초의 '녹색 경영환경 보고서' 를 발표. 세계은행 평가 기준에 맞춰 13개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구의 녹색 발전 역량과 향후 전략 방향 정리 - 개발구는 환경영향평가 통합, 신재생차량 정책 도입,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혁신과 인프라 정비를 병행. 해수 담수화 등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자원 순환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 - 2023년 녹색산업 매출은 1000억 위안 돌파, 탄소 배출 이행률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9년 연속 100% 달성. 다만 녹색 증기 공급과 청정물류는 과제로 남아 있으며, 바이오매스 보일러 개조와 친환경 운송 전환을 통한 대응 계획 수립
	○ 중국, 생물제조·양자과학 등 미래산업 육성정책 발표 예고 - 공업정보화부는 중관춘 포럼에서 생물제조, 양자기술, 원자급 제조 등 신산업의 정밀 배치를 위해 산업정책을 마련 중이라 발표. 이는 향후 5년을 겨냥한 미래 산업 선점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 -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기기, 스마트 안경, 드론 등 1000개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장려하며, 제품 다변화를 통한 소비 진작과 신기술 대중화를 동시에 추진. 지원 품목은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에도 포함 예정 - 산업정책은 ‘1+N 체계’를 기반으로, 핵심 전략과 세부 조치가 연계되도록 설계. 기존 혁신사례 축적, 기술 자립화,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점. 원천기술 돌파와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목표로 설정
	○ 저장성, ‘신제품 우선출시 경제권’ 본격 조성 - 저장성은 ‘저장에서 최초출시’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 진작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퍼스트 이코노미(First Economic)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 다양한 신제품과 혁신 브랜드의 출시에 최적화된 환경 구축에 주력 - 12개 핵심 상권이 ‘4대 퍼스트 경제’로 구성되며, 금융·기술·문화가 융합된 공간에서 브랜드·디자인·전시를 통합 운영. 이는 지역 상권의 흡인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과 연계된 소비 트렌드 창출 기반 마련 - AI 디자인 툴, 전통공예 융합 제품, 커스텀 향기 제품 등 다양한 신제품이 대거 공개되며, 저장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다양성 제고 행사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비 촉진 플랫폼으로 발전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개정안 공개 - 국세총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고 대중 의견 수렴을 개시. 106개 조항 중 16개 신설, 69개 수정, 4개 삭제를 통해 현실 변화와 법치 체계 정합성 확보 목표 -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세 기준 명확화, 지방정부 세수 목표 강요 금지, 탈세 개념 재정립 등을 포함. 조세 행정의 정당성, 투명성,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정비 추진 - 세무조사 절차 간소화, 세무대리 업무 제도화, 신업태 납세자 권익 보호 조항 신설. 납세자의 책임 명확화와 함께 세무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과세 체계 구축 의지 반영
	○ 한중일 제13차 경제장관회의 서울서 개최, 경제협력 확대 합의 - 제13차 한중일 경제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세 나라는 자유무역, 공급망, 디지털경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경제통상 협력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 진전 확인 - 한중일 FTA 조속 추진, RCEP 체제 내 공동 대응, 수출통제 및 공급망 대화 체계 마련 등 구체적 이행 과제 논의. 지역 간 지방 협력 및 황해경제기술 교류 플랫폼 활성화도 공동 추진 예정 - 자유무역체제 유지와 보호주의 반대를 명확히 하며,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경제통합 노력 지속 천명. 이는 불확실성 시대에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산업 협력 강화의 기반이 될 전망
	○ ‘웨강오(粵港澳) 대완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마카오서 발표 - 마카오에서 열린 국제환경포럼(MIECF)에서 발표된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은 18개 전문기관과 32명 전문가가 공동 집필한 대완구 회의·전시 특화 탄소 저감 전략 문서 - 가이드라인은 탄소배출 계산, 감축 실행, 상쇄 및 정보공개를 포함한 전 생애주기적 접근 방식을 제시. 정책 실효성과 업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화 방안 강조 - 발표와 동시에 음식업계와 저탄소 전략 협약도 체결되며, 회의 산업을 넘어 소비업계로도 녹색 전환 확대. 마카오를 아시아 대표 녹색 전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 강화
	○ 충강오(琼港澳) 황금관광삼각지대 조성 협약 체결 - 하이난, 홍콩, 마카오가 관광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황금관광 삼각지대’ 조성을 본격화. 상호 입국 무비자 제도 등 정책 기반을 활용한 다국 간 복합 관광 루트 활성화 추진 - 관광 자원 공동 마케팅, 인적 교류, 고객 송출, 홍보 캠페인 등 전방위 협력이 포함된 협약 체결. 공동 브랜드 개발과 국제적 관광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연계 강조 - 협약은 관광 인재 공동양성, 마케팅 자원 통합, 국제 시장 진출 채널 확대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발판 제공. 지역 간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 후난세무국, 민영경제 지원 위한 ‘세정 12조’ 발표 - 후난성 세무국은 ‘세정 12조’를 발표하며 민영경제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정책 정밀도 제고, 세무 절차 간소화, 법치 기반 행정 강화 등이 핵심 - 전자세무 시스템 확대, 무접촉 서비스 제공, 신설기업 세무 등록 간소화 추진. 세무조사 절차 완화와 신고 오류 시 처벌 유예 등 기업 친화적 세무 환경 조성 병행 - 민영기업 납세신용 회복, ‘세금+금융’ 연계 확대, 무역 기업 환급 지원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이는 민영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법치 기반 강화의 양립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
	○ 랴오닝, AI·디지털로 전통산업 대전환 추진 - 랴오닝성은 ‘AI+제조’ 전략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병행 추진. 2025년까지 디지털 공장 100곳 추가 목표 설정 - 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점-선-면’ 전략 수립, 소규모 디지털 시범사업 확대, 산업대뇌 플랫폼과 디지털 연합체 기반 공동개발 추진. 중소기업 맞춤형 전환 지원도 병행 - 지역별 디지털 전환 시범도시 6곳 지정, 업종별 디지털화 수요 조사 및 공급기업 연결로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 제고 기대
일본	○ 도쿠시마현, 2027년까지 공공시설 40곳에 태양광 발전 도입 - 도쿠시마현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도입을 본격 추진 중이며, PPA 방식으로 초기 투자 없이 에너지 전환을 시도. 이미 6개 시설에서 설비가 가동 중이며, 4월에 9개소가 추가될 예정. 2027년까지 총 40개소 설치 계획 - 발전 사업자가 지붕에 무상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통해, 현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구조. 총 출력은 약 1570kW로 일반가구 230세대에 해당하며, 연간 약 600만 엔의 전기료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 기대 - 고토다 마사즈미 지사는 PPA 모델이 초기비용 없이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탈탄소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을 강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이중 효과 실현 의지 표명
	○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혼다 계열과 자율주행 실험 협정 체결 - 가나가와현과 오다와라시는 혼다기술연구소와 협력하여 자율주행기술 실증 실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산지와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교통문제 해결과 이동수단 확충을 목표로 설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2025년도 중 실험을 개시할 예정이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경로 및 차량을 조정. 목표는 시속 60km로 특정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 가능한 레벨4 구현으로, 2020년대 후반까지 실현을 목표로 삼음 - 혼다기술연구소는 고정밀 지도나 대규모 인프라 없이 운용 가능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 협정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실효성 높은 자율주행 확산을 위한 사회 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둠
	○ 오кина와, 의약 연구거점 본격 가동… 류큐대 기반 강화 - 오кина와현 기노완시에 조성된 의약 연구거점이 정식 가동을 시작. 류큐대학 의대와 병원이 이전하면서 기능을 집중시키고,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실험 오피스도 병행 설치하여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 연구단지는 병원, 교육, 연구 등 5개 시설로 구성되며, 5200㎡ 규모의 최첨단 연구센터를 중핵으로 함. 무균 환경에서 세포 실험을 진행하는 재생의료 전문 플로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13개 입주 공간 중 9곳이 이미 확보됨 - 2만7000명 규모의 오кина와 주민 게놈 데이터를 보유한 바이오뱅크도 입주. 약 1200억 엔의 사업비 중 정부가 878억 엔을 부담하며, 미군 기지 반환지를 활용한 대규모 비상업 개발로서 지역 모델로 주목받는 중
	○ 가와사키시, EV·자율주행 버스로 교통 혁신 본격화 - 가와사키시는 운전기사 부족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및 전기버스 기반 교통혁신 실험 추진. 2025년도에는 급속충전 방식 EV버스 도입, 2027년까지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4 구현 목표 설정 - 올해 1~2월 병원선·공항선 노선에서 실증 실험을 진행해 자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주행 시 차량 감지 오류 및 브레이크 빈도 증가 등 과제를 확인.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발생하는 교통 상황 대응능력의 고도화 필요성 강조 - 기존 EV버스는 완전 충전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인력·시간 부담이 크며, 향후 도심 내 정류장에서 고전압 팬터그래프 방식 급속충전 도입 계획. 기술 실현뿐 아니라 시민 수용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인식
	○ 하마마쓰시, 민간과 협력해 버스망 재편… 자가용 의존 탈피 추진 -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는 원슈철도와 협정 체결 후, 노선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효율적 재편을 위한 공동 관리체계 구축. 2026년부터 실증 운영 시작 예정이며, 시는 연 1억 엔 규모의 예산 지원 계획 - 기존 방사형 노선은 중복구간이 많고 외곽지역은 공백 발생 중. 시는 철도역 중심의 신규 노선 도입 검토 중이며, 민관 연계로 노선 최적화와 수요 대응형 교통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대두 - 시내 교통수단 중 자동차 의존도는 66.6%로, 정령시 중 최상위 수준. 전동 킥보드 공유 플랫폼 '루프'의 도입과 더불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스마트시티 구현을 통해 교통 다변화 및 사고율 저감 목표
	○ 규슈·오키나와, 2월 유효구인배율 1.16배… 3개월 만에 하락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월 규슈·오키나와 유효구인배율은 1.16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만에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 억제 움직임 확대된 것으로 분석 - 후쿠오카현은 1.18배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으나, 전반적 고용 상황은 개선 기조 유지. 사가·나가사키는 각각 0.05포인트 하락하며 제조업 위축에 따른 고용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업종별로는 식음료 제조업에서 3~4월 선물 수요 등으로 구인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늘었고, 외식서비스업은 비용 상승 여파로 채용 축소. 고물가 속에 고령자 구직 증가세도 확인되며, 전반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 지속
	○ 도쿄도, 순환경제·생물다양성 대응 60억 엔 펀드 조성 - 도쿄도는 자원순환·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60억 엔 규모의 공동펀드를 민간과 함께 설립. 지속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자금 지원 수단으로서 펀드 활용 본격화 - 도는 30억 엔을 출자하고, 나머지를 민간이 분담하며 향후 100억 엔 규모를 목표로 투자자 확대 예정. 2030년 2월까지 고도기술 보유기업에 순차적으로 자금 투입 계획 - 리튬이온배터리·태양광 패널 재활용, 자동차·우산 공유서비스, 재생형 농림수산업 등 구체적 투자분야를 제시. 환경과 기술 혁신을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 조성 의지 반영
	○ 도요타자동차, 수소 제조소재 개발 본격화… 전담조직 신설 - 도요타자동차는 수소 제조장치용 소재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혁신재료개발부’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시험생산라인 구축 추진. HV기술을 활용해 수소산업 진출 강화 - 백금·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쓰지 않는 전극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비용 20% 절감 가능성 확보. 실제 장비 크기의 전극 개발로 장비 제조사와의 실증 평가 병행 - 2028년 시장투입 목표로, 니켈수소전지 기술 기반의 시뮬레이션·분석·생산기술 적용. 일본 정부의 수소장비 15GW 도입 목표에 맞춰 관련 소재시장 확대 대응
	○ 나가노 시오지리, 자율주행 실험 통해 지역 디지털 역량 강화 - 나가노현 시오지리시는 레벨4 자율주행 실험을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 고정밀 지도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기술력 향상을 견인. 일반 도로에서 무인 운전 실증 성공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지역 스타트업과 연계한 종합 실험을 기반으로, 생활도로에서의 차량·보행자 혼재 환경 대응 능력을 실증. 경쟁 프로젝트 관계자의 방해 사례도 발생하며 실험 정밀도 주목 - 시민이 클라우드형 취업지원 시스템 'KADO'를 통해 지도 데이터 제작에 참여하며 디지털 취업 기회 확대. 연간 400명 이상이 참여하고 60개 기업과 업무 계약 체결로 이어짐
	○ 치바현, 2023년 관광소비 1조8000억 엔 돌파… 역대 최대치 기록 - 치바현의 2023년 관광소비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8053억 엔으로, 통계 시작 이후 최대치. 경제 파급효과는 2조252억 엔으로 24% 증가하며 관광 회복세 반영 - 인바운드 관광객의 고가 소비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숙박비 인상이 원인. 외지 숙박객 1인당 소비는 약 3만9000엔, 현내 숙박객은 약 2만7000엔으로 모두 증가 - 관광 목적 외국인 1인당 소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63% 증가한 5만3007엔. 체류형 관광 증가로 현내 순환 유도 효과 기대. 관광객 수는 1억6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
	○ 군마현, 중소기업 임금 인상 지원… 4개 시정촌 추가 보조 - 군마현은 중소기업의 5% 이상 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임금 인상 촉진 보조금'을 신설. 2025년 예산에 최대 5만 명분 27억 엔 반영, 도입 기업에 직원 1인당 5만 엔 지원 - 오타시, 시부카와시, 다마무라정, 오이즈미정은 추가로 1만~2만 엔을 보조하며, 각 시정촌도 현과 동일하게 1사업장당 최대 20명까지 지원 대상 설정 - 재원은 국비 '고물가 대응 특별교부금'을 활용. 군마현은 임금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 프로젝트' 일환으로 해당 제도를 적극 추진 중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 필리핀, 2026년까지 태국형 메가 푸드허브 건설 추진 - 필리핀 농업부는 고품질 농산물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까지 루손 북부·남부 지역에 두 곳의 메가 푸드허브를 신설할 계획 발표 - 첫 허브는 팜팡가 주 클라크에 3050헥타르, 두 번째는 케손 주에 2030헥타르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총 건설비는 최대 70억 페소에 달할 전망 - 정부는 메가 허브 건설 외에도 전국 저온저장시설 99곳 신설 계획을 병행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공급망 체계화 추진
	○ 필리핀, 튀르키예와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필리핀 통상부는 주튀르키예 필리핀 대사와 관광·무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필리핀 홍보 프로그램인 ‘타라 나 투 어’를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제시 - 해당 프로그램은 필리핀 전역의 문화유산 및 산업 잠재력을 홍보함으로써, 무역·투자 유치와 함께 문화 교류 증진 효과도 함께 도모 - 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인프라·에너지·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도 모색
	○ 필리핀, 미중 무역경쟁 속 중국 기업의 생산기지로 부상 -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 따라 중국 제조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필리핀을 생산기지 이전지로 주목하고 있으며, PEZA는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 -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 주요 기업들과 투자 상담을 진행하며, 이미 TE커넥티비티의 17억 페소 규모 프로젝트가 승인되어 2천 개 일자리 창출 예정 - 필리핀은 대만·홍콩 포함 중국권 투자자를 FDI 전략 대상으로 설정하고, 일부 중국 도시의 기업단체가 PEZA에 무상 사무 공간 제공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美 반도체 관세 부과로 무역 위기 직면 - AMRO는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한 조치가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말레이시아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신중한 대응을 촉구 -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테스트·패키징 글로벌 점유율 13%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 반도체 수출국으로서 위기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 - 중앙은행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통화 안정화 및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강조 ○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원국들과 현지 통화 기반 무역 강화 추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현지 통화 사용을 통한 역내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통화 협력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음 - 4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무역결제, 금융 포용, 지속가능 프로젝트 자금조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QR결제 및 연계결제 시스템 확대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태국 등과 현지통화 결제협력 강화도 중점 추진 계획에 포함됨
라오스	○ 라오스, 수력발전 부문 외국인 투자 기회 확대 - 라오스는 7,000MW 이상 수력발전 용량을 보유한 재생에너지 허브 국가로, 남튼2·싸야부리 등 주요 댐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공급 기반을 지속 확장 중임 - 정부는 20개 이상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검토하며, PPA와 BOT 방식의 양허 계약으로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계획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 라오스는 아세안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 부응해 태양광·풍력도 함께 추진 중이며, 수력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루피아 27년래 최저치 기록… 중앙은행 시장 개입 준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루피아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함 - 중앙은행은 성장률, 물가, 외채 등 경제 기초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시장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며 투심 진정을 유도하고 있음 - 경제조정부장관은 견고한 국내 수요와 구조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기반 위에 있다고 재차 강조함
베트남	○ 베트남, 중소기업 위한 포괄적 금융 생태계 구축 추진 - 베트남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접근성 확대와 혁신 유도를 위해 맞춤형 금융상품과 생태계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 - 현재 중소기업의 98% 이상이 담보 부족, 신용기록 미비 등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금리 부담도 기업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은행·협회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대상 금융교육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며, 기업금융의 포용성과 유연성 제고에 나설 방침 ○ 베트남, LNG·자동차·농산물 관세 인하 추진 -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LNG·자동차·농산물 등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대미 무역조정예 나르고 있는 실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 자동차 관세는 최대 64%에서 32%로, LNG는 5%에서 2%로 인하되며, 에탄올도 5%로 낮춰 미국의 관세 보복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 - 베트남은 2025년 3월 말까지 관련 개정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출입 관리 강화 및 무역사기 방지 제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
	○ 베트남, 영국과 소비자보호 관련 양해각서 체결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경쟁위원회와 주베트남 영국대사관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제도적 연계를 강화 - 협약은 결함 제품 리콜, 대중 인식 제고, 규제 당국 역량 강화 등 실무 중심 협력을 골자로 하며, 기술지원과 공동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 - 영국은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행정 개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아세안-영국 경제통합 프로그램 일환으로 양국 관계 심화에 기여
싱가포르	○ 싱가포르와 베트남, 5개 신규 협정 체결로 관계 강화 -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에너지·디지털·금융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 - 신규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착공과 탄소배출권 연계 등 지속가능 산업 중심의 협력이 이뤄지며, 33조 원 규모의 누적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실정 - 양국은 식량안보·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베트남의 농업 역량을 식품 공급망 파트너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 캄보디아, 신규 투자 프로젝트 12건 검토 - 캄보디아투자청(CIB)은 총 1억 400만 달러 규모의 12건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1건 추가 생산 프로젝트를 공식 검토하며 투자 활성화 추진 - 전기·의료·금속·전자·목재·조명·세탁서비스 등 다방면 산업이 포함되며, 약 4,4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 - 해당 프로젝트는 프놈펜, 시아누크빌, 타케오 등 주요 거점 지역에 분산될 예정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다각화를 위한 전략적 유치 계획으로 평가
	○ 캄보디아, 홍콩과 보건의료 협력 강화 논의 - 캄보디아 보건부장관과 홍콩 상무장관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병원개발 등 구체 분야 협력과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에 공감 - 회담에서는 일대일로(BRI)를 양자경제협력의 기반으로 삼아 공공보건 및 경제개발 연계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 - 캄보디아는 홍콩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건지식 교류, 의료 인프라 발전 등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연계 정책을 추진할 계획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